

# 기획처장 좌담회

□ 일 시 : 2008년 1월 22일(화) 15시  
 □ 장 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의실  
 □ 진 행 : 김건기(광주대학교 교수, 대학교육지편집자문위원회 위원)

□ 참석자 : 김주현(숙명여대 기획처장), 김철규(한밭대 기획  
 홍보처장), 최미리(가천의과대학대 기획처장), 황영  
 기(경남대 기획처장)  
 □ 정 리 : 황인성, 정수경(대교협)



**진행자 :** 새 정부 인수위가 밝힌 바대로 새 정부 교육정책 기조가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큰 흐름은 자율화일 것 같습니다. 이미 대학입시 정책에 있어서 대학 자율화 원칙에 따라 대학협의체에 업무를 이관한다고 하였고 고등교육 주요 정책들도 자율화라는 원칙으로 운영되리라 전망합니다. 고등교육 및 연구의 향상을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정부의 정책, 법·제도적 지원, 질 향상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노력이 서로 맞아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각 대학의 주요 정책 결정의 핵

심적 역할을 수행하시는 기획처장님들을 모시고 관련 업무의 자율화와 법·제도적 지도적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논의는 크게 대학의 재정확보방안, 특성화 및 경쟁력강화방안, 대학 간 협력체제 강화 방안, 정보공시제의 공시내용 및 활용 범위, 대학평가에 대한 대학의 의견 등으로, 현재 각 처장님들께서 대학에서 담당하는 업무 중에서 모든 대학에 공통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선정하였습니다.

## 대학재정 확충

**진행자 :** 먼저 대학재정확보에 있어 정부의 역할 및 대학자율화 방안 논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07년 9월 현재 교육인적자원부 예산 중 고등교육지원예산은 11.1%에 불과합니다. 또한, 현재의 교육예산확보 방식으로 볼 때 초·중등교육재정의 증가나 전체적인 국가예산 상황에 따라 이러한 지원마저 안정적인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교육재정지원을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각 대학의 예결산편성의 주무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처장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지난 2004년 11월 24일에 박찬석 의원 외 의원 50명이 발의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에는 “고등교육기관에 지원하는 교부금의 재원은 당해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한밭대 김철규 처장** : 말씀하신대로 2006년도 고등교육재정 정부 부담액이 GDP의 0.6%로, OECD 평균 1.1%와 비교하여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수 1인당 학생 수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국가 평균보다 약 1.6배, 일본보다 2.3배로 열악합니다. 또한, 4년제 일반대학 전임교원 확보율은 약 55%로,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50여 명 정도의 아주 열악한 수준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대학재정의 획기적 확충이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대학에 대한 기부금 활성화, 세제혜택, 고등교육재정 지원 입법을 통한 포물러 펀딩 도입 등을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교육정책으로 발표한 적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초·중등학교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지원받는 것처럼 대학에도 법적인 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천의과대학 최미리 처장** : 국회 교육위(2007. 8. 29)에서 2008년도에는 1조원의 고등교육 재정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고등교육기관 지원 교부금 재원을 일정 비율로 법제화해서 지원 보장한다는 방안에 찬성하고, 확보예산의 규모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연구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확충 방안으로 간접세의 일부분을 고등교육재정에 할당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남대 황영기 처장** : 큰 테두리 안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7년 초를 기준할 때, 대학생 수에 비해 고등학생은 0.55배, 중등학생 0.64배, 초등학생도 1.21배, 유치원학생 0.17배로 교육을 받는 피교육자 총 인원중 대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1/4이 넘는 28%라고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하였는데, 현재 고등교육 예산은 11.1% 수준으

로 매우 열악한 수준에 처해 있습니다. 고등교육 예산으로 최소한 28%는 배정되어야 인원 비율에도 맞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고등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가 교육비 중 고등교육예산 비중을 3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는 인원 비율과 비교하여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재정 지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숙명여대 김주현 처장** : 대학 쪽에 재정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은 실천의지라고 생각합니다. 큰 방향은 정부가 가진 재정을 직접적으로 대학에 지원하는 방법과 세제 혜택과 같은 간접적으로 재정지원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구체적 내용들도 여러 경로를 통해 제안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내용들을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행자** : 우리나라 예산 배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교육예산을 전체적으로 잡아서 쪼개는 형태를 띠고 있어서 초·중등 지원액이 증가하면 고등교육 예산이 감소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할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한밭대 김철규 처장** : 지금까지 초·중등교육에는 많은 예산 투자가 이루어져 온 결과, 현재는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으로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학 교육환경은 많이 열악합니다. 이제는 전체 대학교의 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도 대학에 많은 예산을 배정해 대학 교육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가천의과대학 최미리 처장** : 현재처럼 교육 예산 전체를 나눠서 지원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절대적 고등교육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논리가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경남대 황영기 처장** : 실질적으로도 초·중등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고등교육과의 비교는 어렵지만, 초·중등교육 예산은 OECD 국가들의 평균치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고등교육 예산은 OECD 평균치의 30%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국립대학의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초·중등 교사 1인당 학생 수에 비해 많고 사립대학은 더욱 열악합니다. 정부가 사립대학을 국민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공익성 교육기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개인 기업처럼 인식하고 있어 재정 지원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부 차원의 인식 전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사립대학을 공익성 교육기관으로 인정해주어야 하고 예산을 증액하여 사립대학에 국립대학 수준의 재정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등 고등교육을 위한 새로운 법 제정 움직임은 바람직하다고 보나, 그 목표치가 OECD 수준까지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대학재정 확충

**진행자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에 대한 논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대학 등록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하여 2008학년도 등록금 인상 및 절대금액에 관해 또 다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학등록금 책정의 문제는 학교의 종류, 즉, 국립과 사립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학교 규모에 따라서도 다소간의 격차를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학등록금에 관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교육소비자의 교육비 부담을 어떻게 경감시킬 것인가로 귀착될 것 같은데 대학의 자율화와 연계하여 각 처장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숙명여대 김주현 처장 :** 기본적으로 대학의 재정구조상 등록금 의존도가 높다보니 매년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대학에서는 대학의 재정 수입 구조 중에서 등록금 의존도를 줄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논의되었던 재정 지원이 중요한 것입니다.

**경남대 황영기 처장 :** 대학 예산에서 등록금 비중이 60%~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학의 전체 예산중 등록금 비율을 50% 이하로 낮춰야 합니다. 등록금 비중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는 첫째, 외부 자금 유입이 늘

나 둘째, 내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인데, 실제로 내부 수익 창출은 매우 어렵습니다. 외부 자금 유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고등교육예산의 지원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한밭대 김철규 처장 :** 국립대학에서도 지금은 학생들로부터 받는 등록금이 전체 예산의 60%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대학에서 다른 수익 구조를 창출해야 하지만 현재 학교기업의 경우에도, 수익 발생분이 학교 수입이 되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등 결국은 학생들의 등록금을 올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립대학은 누적적립금이라도 있지만, 국립대학은 전혀 여유 예산이 없습니다. 따라서 목표로 정해진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등록금 인상에 따른 학부모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국가재정 지원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장학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진행자 :** 등록금에 대해서 대학 내부에서는 재정 구조적 문제를 얘기하지만, 외부에서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혹은 선진화된 국가의 등록금 수준과 절대적으로 비교하여 대학 적립금을 놔두고 등록금을 계속 인상하는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숙명여대 김주현 처장 :** 단순히 비교는 할 수 있겠지만, 절대 금액 자체의 비교뿐만 아니라 왜 그런 차이가 나는지 정부지원, 외부기금 등 배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등록금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등록금 관련 법안도 나왔었는데, 상한선을 정한다던지 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진행자 :** 등록금 문제에 대한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학 재정 구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밭대 김철규 처장 :** 등록금 예고제를 도입하여 입학생에게는 예고를 하고, 재학생에게는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한 금액 제시로 등록금을 합리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경남대 황영기 처장** : 제 생각에 등록금 관련 핫이슈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적립기금입니다. 적립기금이라는 것을 외부에서 보기엔 많다고 생각하겠지만, 기금이 많은 대학도 1년 대학 운영 예산이 되지 못합니다. 기금에 대해 적어도 1년 대학 운영 예산의 50%까지는 적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등록금 예고제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이와 관련하여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결론은 신입생 등록금에 대해 4년간 동결하여 예고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황의 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원칙이라 생각합니다. 예고제라는 것은 신입생의 등록금을 예고하는 것으로 하고, 동결 원칙을 떼지 않으면 실용화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세번째는 등록금 합의 문제입니다. 등록금 합의에 관해서는 법제화, 예를 들면 물가인상률과 임금인상률의 두 배를 초과할 수 없다든지 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대부분이 등록금은 계속 인상되는 고정변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2017년 이후에는 인하도 될 수 있는 가변변수라고 봅니다. 등록금 인상 최대폭만 법제화하여 정해놓고 등록금정책에 대해서는 자율화해야 합니다. 대학에서 등록금 인상율을 높여 인원 70%만 선발하던지, 등록금을 낮춰 100% 모집하던지 대학마다 고민하여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숙명여대 김주현 처장** : 법제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자율화라는 큰 틀에서 볼 때 문제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정부의 인식 변화가 중요합니다. 사립대학에 대해서 대학의 책무성을 강조하면서 실질적 지원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생들 입장에서 사립대학에 진학하는 이유로 국가의 재정 지원차이에 따른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문제가 커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경남대 황영기 처장** :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봅니다. 국립대학 법인화가 추진되면서 국립대학의 등록금이 많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민이 내는 교육세는 전부 국립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교육세를 내는 국민의 자녀 70%가 사립대학에 진학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내가 내고 있는 교육세의 혜택을 내 자녀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립대학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적어도 사립대학의 80~90%까지는 등록금이 올라야 하고, 이렇게 되면 현행 예산 범위 내에서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영역이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한밭대 김철규 처장** : 대학의 전체 예산 중 현재 국립대학에 지원되는 국가 부담이 약 40%정도인데, 지원에 따르는 국가의 간섭과 규제가 매우 많아 학교 운영이 매우 어렵습니다. 국립대학이 법인화될 경우, 실제 사립대학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등록금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립대의 법인화에 관해서 한 가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립대학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저렴한 학비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공학분야 등을 운영하는 등 교육의 공공성 측면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사립대학과 똑같이 경쟁을 한다면 국립대학도 예산 지원이 많이 드는 부분은 포기하게 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소외계층에 대한 혜택도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경남대 황영기 처장** : 국·사립을 나누지 말고 모두가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논의하고, 정부 정책이 잘못되었다면 정책이 수정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 대학에 대한 기부금

**진행자** :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가 나오는 것은 등록금 문제가 등록금 자체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등록금 문제는 이 정도로 논의를 마치고 다음은 기부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표한 국내 사립대학의 주요 재정수입구조를 살펴보면 대학의 주요 재정수입 항목은 등록금, 기부금, 국고보조금 그리고 재단전입금으로 볼 수 있고, 2003년 이래 등록금 수입은 증가한 반면, 그 외 항목은 줄어든 것이 큰 특징입니다. 특히, 기부금은 2003년 9.4%로부터 2004년 8.6%, 2005년 4.4% 등 매년 큰 폭의 감소를 보

이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관한 처장님들의 의견을 교환해 주십시오.

**숙명여대 김주현 처장** : 현재는 기부금에 대해서 소득 공제만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대학에 대한 기부금은 세액 공제를 해주면 개인 기부가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경남대 황영기 처장** : 큰 기조로 볼 때, 소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기부금액이 클 경우는 소득공제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기준으로 개인의 경우 본인 소득의 1% 정도는 세액공제를 해주고, 나머지는 소득공제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숙명여대 김주현 처장** : 구체적 숫자까지도 제안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정치후원금에 적용되고 있는 10만원 세액공제제도를 참고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이왕 세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교육과 연구사업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여 기자재구입 등에 따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남대 황영기 처장** : 현금 외에도 인력, 기자재 등의 기부 경우에도 세액 또는 소득공제가 필요합니다.

**진행자** : 좋은 지적입니다. 통계를 보면, 기부 주체 80%가 기업입니다. 2003년과 2005년을 비교해 보면 대학 전체 재정규모는 늘고 있으나,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9.4%에서 8.4%로 줄어들었고, 그 차액이 5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기부금이 줄고 있는 이유가 세제와 관련이 있을 듯합니다.

**경남대 황영기 처장** : 기업이 내는 기부금에 대해 현재 50%만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데, 소득공제만큼은 100%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한밭대 김철규 처장** : 서울 소재 대학의 경우는 그래도 기부금이 많은 편이나 비수도권 대학의 경우는 기부금 비율이 아주 낮습니다. 세율 혜택을 수도권/비수도권 및 시군단위 등 지역별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기업 소재지를 불문하고 수도권 대학에 기부할 경우,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기부할 경우, 그리고 좀 더 지방

인 시군단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에 기부할 경우 세제 혜택 비율을 차등하여 높여 주는 것도 검토할 만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대학의 재정확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고 지방경제가 더 활성화 되어 지역균형발전의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기부금 문제에 대해서는, 기부금 소액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 설정이 필요하며, 기업기부금 활성화를 위해 세제 감면 혜택을 100%로 확대해야 할 것과 지역별 구분 차등 세제 혜택, 기자재 및 인력 기부에 대한 세제 혜택 등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 산학협력단의 수익사업

**진행자** : 재정 부분 마지막 질문입니다. 산학협력단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 수익사업의 증대방안에 대해 정부의 역할과 대학의 자율화라는 측면에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밭대 김철규 처장** : 학교에서 산학협력단을 통해 수익을 올리기보다는 대응투자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대응투자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학교기업의 수익이 현 제도 하에서는 대학교의 재정수입이 되지 못하고 그 구성원들에게 쓰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응투자 때문에 학교 재정을 오히려 학교기업에 지원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남대 황영기 처장** : 그 부분에 있어서 발표된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과기부 부총리가 2008년부터 대응투자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과 두 번째는 정부 사업비의 오버헤드(간접투자비)를 현행 10~15%인 것을 연차적으로 올려 30%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발표된 약속만 지켜진다면 산학협력단의 자립도 돕고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이나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다고 봅니다.

**한밭대 김철규 처장** : 현재 산학협력단 수입이 기성회계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학생들의 등록금을 받은 기성회계로 산학협력단에 지원만 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학교기업에 대한 제도개선도 필요함

니다.

**진행자 :** 재정에 관한 것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위한 대학의 특성화 및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두 가지 질문을 마련하였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지원 방식이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즉, 전체 지원예산을 모든 대학에 공통적으로 배정하는 기본지원과 경쟁에 의한 지원 방식으로 나누어 시행하던 방식에서 전체 예산을 통합하여 단일한 경쟁 방식으로 지원하는 체제로의 전환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를 포함한 정부의 모든 재정지원 방식에 대한 각 대학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대학재정지원 방식

**한밭대 김철규 처장 :** 국립대학 관점에서 얘기하자면, 국비 지원이 그간 대학 학생 수에 근거하여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것보다는 지역별·특성별로 고려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가천의과학대 최미리 처장 :** 대학재정지원 평가지표 자체가 연구중심대학에 좀 더 많이 가능성을 둔 체제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중심대학은 불이익을 많이 받습니다.

**진행자 :** 현재 국립대 지원액, BK21 사업은 별개로 생각하고, 지방대학은 NURI사업으로, 수도권대학에는 수도권대학특성화사업으로 단일화해서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명여대 김주현 처장 :** 학교마다 이해관계가 다르지만, 절충형도 가능할 것입니다. 일정 기준을 정해서 기준 이상을 도달했을 때 기본경비를 지급하면서 경쟁 사업비를 배분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현재의 BK, NURI, 구조조정, 특성화사업 등 목적별 사업의 경우, 정부가 정한 목표대로 끌고 가는 것인데, 사업효과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정부의 의도가 맞는 것인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경남대 황영기 처장 :** 현재 얘기하고 있는 사업성 예산 자체가 극히 적으므로, 공공성을 고려한 기본 예산 배분

을 이 예산에서 쪼개서 나누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경비를 배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학특성화와 관련하여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정부의 추진방향을 따라가는 대학은 지원하고, 못 따라가는 대학에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대학의 교육환경 개선을 보고 재정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각 대학이 목표치를 설정하고, 목표치 이상의 개선을 하면 재정 지원을 하고, 개선도가 없거나 또는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재정 지원을 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 대학특성화와 경쟁력 강화 방안

**진행자 :** 다음으로는 대학의 특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주제는 1990년대 이래 계속 논의되어 왔고 그 중요성은 새삼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봅니다. 대학의 특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 대학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특성화 시키고 싶어도 규제 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밭대 김철규 처장 :** 지금 대학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혼돈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간 대학을 특성별로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및 현장실무교육중심대학 등으로 구별하고 있는데, 이런 분류체계가 현재 맞지 않습니다. 공학분야의 경우, 현장을 떠나 교육을 말할 수 없고, 첨단과학기술시대에 연구가 이를 뒷받침하지 않으면 현장실무교육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런 식으로 대학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전문대학의 수학연환을 자율화함에 따라 전문대학이 현실적으로 없어지고 모든 대학이 4년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선진국의 교육체계를 볼 때, 2년제 전문대학은 그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은 교육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시대변화에 교육정책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특성화나 경쟁력강화 이전에 대학 간의 역할과 기능

을 정부가 명확히 하여 교육체계를 새롭게 정립해줘야 할 것입니다.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율화는 좋지만 대학입시 및 대학정원 등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립대학 총장에게 5급 이상 행정직에 대한 인사권을 확실하게 부여해야 하며, 인수위가 사무국장 파견을 낙하산으로 규정하여 금지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조치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현재 각종 규제로 원활한 대학 특성을 살리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학 자체적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총 정원범위 내 주·야간학과 정원배분 자율화, 학과 전공 신설 폐쇄 문제, 산업대학의 일반 대학원 개설 등의 많은 부분의 규제를 풀어줘야 합니다.

**경남대 황영기 처장 :** 다른 측면에서 깊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미래 산업인력을 교육시킨다는 뜻이겠지만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처럼 교육인적 자원부까지도 미래지향 성장동력산업 위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각 대학에서 대부분 IT, NT, BT 등 특정 분야만을 특성화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교육대학, 신학대학, 예술대학, 농·축·수산대학 등은 교육부의 특성화 방향과 맞지 않아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이러한 방향은 옳지 못합니다.

**한밭대 김철규 처장 :** 결국 대학의 정체성 문제입니다. 교육부가 각 대학의 정체성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개발과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대학이 자발적으로 특성화 분야를 개발하여 특성화 할 수 있도록 제한하지 말고 이끌어줘야 합니다.

**가천의과학대 최미리 처장 :** 프로젝트 보고서만 잘 써서 사업비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현재와 같은 평가시스템은 문제가 있습니다. 각 대학이 설립목적대로 특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합니다.

**숙명여대 김주현 처장 :** 특정 학문분야의 특성화와 연계된 재정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특성화는 재정지원여부를 떠나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며, 이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 대학 간 협력체제 방안

**진행자 :** 대학 간 협력체제 방안에 대한 논의로 이어가겠습니다. 현재에도 대학 간 협력은 점점 증대되고 있습니다. 학점교류 및 공동학위 수여, 도서관 자료 및 기자재 공동 활용 방안, 공동연구 방안 등을 포함하여 대학 간 협력의 구체적인 방안 대하여 의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숙명여대 김주현 처장 :**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초과학(순수학문) 분야의 투자가 미흡한 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예를 들면 A대학과 B대학이 전략적 제휴라도 맺어 산업체에서 조직 일부를 떼어 M&A를 하듯 대학의 소속은 살리되 운영만 합치는 식, 교수·수업 등의 공유 등을 도입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 당사자 간의 신뢰만 담보된다면 정말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가천의과학대 최미리 처장 :** 그것이 바로 대학 간 특성화입니다.

**진행자 :** 공동학위 수여는 어떨까요?

**경남대 황영기 처장 :** 큰 틀에서 보면 정부와 관련 없는 대학 간 교류부분인 학점교류 및 공동학위 수여, 도서관 자료 및 기자재 공동 활용 등은 아주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경남대의 경우 학점교류는 국내 다수의 대학과 하고 있고, 한국 지역대학 연합이라고 하여 지역 8개 대학이 행정정보까지 모두 공유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대학간의 공동학위 수여는 확대하면 좋겠지만 수도권으로 집중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진행자 :** 수도권-지방대학이 공동학위를 수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천의과학대 최미리 처장 :** 아무래도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수도권 대학에 가고 싶어하니까 수도권 대학 쪽에 치우치게 될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대학의 수준이 비슷하거나, 지역에 있는 대학끼리 교류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숙명여대 김주현 처장 :** 전적으로 대학들이 알아서 할 문제일 것입니다.

**가천의과학대 최미리 처장** : 공동학위보다는 복수전공 학위가 더 실용적이지 않을까요?

**숙명여대 김주현 처장** : 우리 대학의 경우 복수전공 학생이 매우 많습니다. 현재 8학기에 졸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9~10학기까지 이수하도록 하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가천의과학대 최미리 처장** : 복수학위를 하려면 다학기제로 가야합니다.

## 정보공시제와 대학평가

**진행자** : 다음은 정보공시제에 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교육관련기관의정보의공개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공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학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에 대학평가 및 그 결과의 의무공시를 규정함으로써 대학정보공시제가 두 가지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도록 되었습니다. 2008년 5월부터 실시되는 정보공시제의 내용 및 범위에 대한 대학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가천의과학대 최미리 처장** : 기본적으로 교육소비자의 알 권리라고 생각하지만 대학 서열화를 조장할 수도 있어, 상대적으로 열악한 대학은 더 어려워 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숙명여대 김주현 처장** : 원칙적으로는 찬성합니다. 구체적 내용면에 있어서는 이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천의과학대 최미리 처장** : 찬성은 하지만 정보공시 문항을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남대 황영기 처장** : 일례로 취업률 통계는 허수가 많다고 봅니다. 취업률의 퍼센트를 늘리기 위해 심지어 아르바이트 일자리카지 통계에 집어넣습니다. 정보공시제를 도입하려면 정량화되기 힘든 항목들은 삭제하고 정량화된 지표만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재정분야의 공시내용에 대한 문제는 없을까요?

**한밭대 김철규 처장** : 객관적 자료이므로 다 공개되어

도 문제없다고 봅니다.

**진행자** : 학과/학부별 학점 평가, 성적평가 분포 등의 항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남대 황영기 처장** : 이러한 데이터는 악용될 소지가 높습니다. 대학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은 항목은 모두 삭제하고 대략 10개 정도로 항목을 줄여야 합니다.

**진행자** : 그렇다면 정보공시내용을 대학평가-재정지원과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밭대 김철규 처장** : 객관적으로 증빙된 데이터라면 사용은 가능할 것입니다. 어차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수능점수별로 대학을 서열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보공시 내용으로 대학의 종합적 평가를 받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일 수 있을 것이고, 정보공시가 학교 발전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숙명여대 김주현 처장** : 결국 평가든 정보공시든 얼마나 신뢰성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경남대 황영기 처장** : 정보공시와 재정의 연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보공시는 최소한의 항목으로 축소해서 대학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로만 사용하고, 대학평가는 현재보다는 개선해서 재정지원과 연계되어야 하며 동시에 대학 컨설팅 역할을 추가함으로써 대학 발전을 유도하는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밭대 김철규 처장** : 대학이 달성하고자 하는 대학의 수준과 목표가 다르므로, 각 대학별 목표를 정해서 목표의 달성도에 따라 재정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남대 황영기 처장** : 극단적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은 선진 외국의 명문 대학과 비교하여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하므로, 국내 일류 대학이라 할지라도 자체적으로 설정한 목표를 달성했을 때에만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대학에 대해 획일적인 잣대로 평가하여 재정지원과 연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대학은 안주하게 되고, 열악한 대학은 포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합니다.

**진행자** : 정보공시와 평가 문제까지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2주기 평가가 끝났는데, 1주기와 비교하여 의



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밭대 김철규 처장** : 우리 대학은 1주기에는 ‘인정’을 2주기 평가에서는 산업대에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재정지원과는 연계되지 않았지만 평가를 준비하면서 학교 전반적 시스템이 좋아졌습니다. 평가가 대학의 질을 제고 한다는 측면은 긍정적이며, 평가 항목의 손질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평가 지표 및 기준은 국제적 수준에 맞춰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숙명여대 김주현 처장** : 현 대교협 평가에서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부담이 큼니다. 우리 대학의 경우 1주기에는 학교의 전체 시설 등 교육환경이 업그레이드 되는 효과가 있었으나, 2주기에는 그 효과가 크지 않고 재정지원 연계도 없는 상황에서 업무 부담을 느꼈습니다. 평가의 순기능은 인정하나 평가 항목, 평가 방법 등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경남대 황영기 처장** : 다음 평가는 1,2주기와는 차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평가지표들의 평점이 높거나 개선도가 높은 대학들에게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고, 절대적 평가기준에 미흡한 대학이나 개선도가 부진한 대학에는 각 대학의 우수 사례를 표집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맞춤형 평가가 되어야 바람직합니다. 또한 대학평가 시설립목적이 특수한 대학에 대한 인정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대학평가 단체, 기구 등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기구나 언론사들의 평가결과에는 우수한 대학의 소개나 사례를 발표하게 하되, 순위 발표를 허용해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신에 대학의 컨설팅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진행자** : 오랜 논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